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입 장 태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여 남북경제의 피해규모를 전망하는 작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입게 되는 손실규모는 매우 복잡적이어서 몇 가지 항목을 더 하는 식의 단순 계산법으로 추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되어 개성공단단지의 폐쇄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의 심화로 연결될 경우 남북 경제의 직·간접적인 손실은 보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른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에 중단 대상이 되는 남북교역 규모가 남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는 14.5%의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 경제에는 0.1%에 불과하여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남북 경제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2009년 대외무역액	2009년 남북교역액 (개성공단 제외)	비중
북한	50.9억 달러 (남북교역 포함)	7.4억 달러	14.5%
남한	6,866.2억 달러		0.1%

출처: 한국무역협회, KOTRA, 통일부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단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규모를 유형별로 살펴보자.

<표 2> 2009년도 유형별 반·출입 현황

	반 입	반 출
일반 교역	245.2백만 달러	10.9백만 달러
위탁가공교역	254.0백만 달러	155.7백만 달러

출처: 통일부

<표 2>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른 일반교역 중단으로 인하여 (2009년 기준) 북한으로부터 2억 3,430만 달러에 달하는 순 반입액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입에 따른 통관 및 하역 비용, 선박운임,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약 10%로 계산했을 때, 일반교역 중단에 따른 북한의 순 외환수입 감소규모는 2억 1,087만 달러로 추정된다.

반면에 위탁가공교역의 경우에는 원부자재가 북한으로 반출되어 완성품을 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가공료가 북한의 외환수입에 해당한다. 그런데 임가공료는 품목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임가공료가 가장 적은 라이타 같은 경우에는 반입액의 1%에 불과하지만, 신사복 상의의 경우에는 임가공료가 반입액의 30%를 상회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가공 품목의 대부분이 반입액의 10~1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수치인 12.5%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2009년도 북한에 지불된 임가공료는 3,175만 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선박운항 금지에 따른 북한측의 소득 감소분을 추가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북한측의 단기적, 직접적인 외환수입의 감소분을 추정할 수 있다. 선박운항 금지 조치에는 제주해협 통과도 포함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 추정치 매년 100만 달러와 남북교역물품 운송수입 추정치 900만 달러를 합하면 1,0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의 선박운항 금지에 따른 외환 획득액 감소분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남북교역 중단 조치로 인하여 단기적·직접적으로 북한측이 감당해야 하는 외환수입의 감소 부담은 (2009년 기준) 2억 5천 2백 6십 2만 달러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교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사업자가 북한 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북측에 상당 액수의 금액을 건네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북한의 실질적인 외환수입 감소 규모는 위에서 추정한 규모보다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외환수입 감소분은 중장기적으로 수입선의 전환이나 새로운 투자처 확보를 통해서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천안함사건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남한을 대체할 교역 상대를 모색하는 작업이 그리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 북한의 경제적 부담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투자 유치에 기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남북교역의 주력품목인 농수산물, 모래 등의 경우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할 경제적 부담은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최근 남북관계의 정체국면으로 시설투자 등의 활동은 이미 이전부터



거의 중단되었다는 점이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손실 정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황 극복을 위한 역량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 기업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그동안 북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물가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